



남북한 하나된 평화제전, 평창동계올림픽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5개 종목 총 2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우리나라도 15개 전 종목에서 145명의 선수 등 220명이 참가한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평화올림픽'의 정신에 걸맞는 행사가 되기를 전 국민이 소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강원도 강릉선수촌에서 진행된 한국선수단의 공식 입촌식 모습.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행안부 "공정한 6·13 선거 지원"

6·13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 개소
지자체 선거업무 추진상황 종합 점검·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합동상황실은 행안부,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선관위, 자치단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 내에 공직비리감시반을 구성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접수하고 필요시 선관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기는 등 선거 관련 공직비리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선거비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합동상황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부겸(왼쪽 첫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심보균(왼쪽 두번째)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환한 제막식 후 박수치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올해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철 기자 imnews656@

지면 안내	
완도군 가뭄 극심, 주민 피해	2면
서울시의회 개헌 릴레이	8면
파워인터뷰-심석 김영배 화백	3면
고속도로 이색 휴게소	10면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전수점검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회의를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진단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영재 기자 jae-63@

"지역이 강한 나라 만든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일자리 지역혁신 등 전략 제시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확정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감소지역으로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류자산의 경

제적 자산화 등이 꼽혔다.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 정비 방안으로 균형발전 상생회의의 제도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자치지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 인구 순유입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올해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neungja@

평창올림픽 24시간 감염병 검사체계 구축

검사인력·장비 지원 등 비상근무

질병관리본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 지원에 설치된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에 검사인력을 각각 10명, 25명 파견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일본은 효율적인 검사 수행

을 위해 현장검사지원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장비를 대회 기간 동안 지원한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감염병 80종 가운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48종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외 감염병 또는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할 예정이다.

일본 관계자는 "이번 감염병 실험실 검사분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기자 kmjh2001@



질병관리본부 제공

용평은 국가대표다!

PRIDE | 용평

1975년 국내 최초 스키장.
국내 최대 520만평 리조트.
국내 최장 25.5Km 슬로프.
국내 최다 50회 국제스키대회...
대한민국 스키의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